

“지금까지 이런 총선은 없었다”

대안신당 창당으로 9개로 늘어…이언주 창당시 10개
총선 위해 ‘이합집산’ 움직임… “희화화된 정치 모습”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대안신당이 12일 공식 창당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 뒤게 될 원내정당 수가 9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민중당)로 늘어났다.

총선이 끝난 후 구성될 21대 국회의원 내정당 수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원내정당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셈이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들을 보더라도, 총선 전에 이처럼 많은 원내정당이 난립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가장 많은 원내정당이 참여한 선거는 2008년 제18대 총선이다.

당시 통합민주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 등 6개 원내정당이 출사표를 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세력들이 만든 친박연대, 이희창 전 대선 후보 등의 충청권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문국현 전 대선 후보가 만든 창조한국당 등이 만들어진 데 따른 결과였다.

지금도 무려 9개의 원내정당이 난립하게 됐지만 곧 두자릿수를 넘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전진당(미래를향한전진4.0)이 오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준비 중이고, 여기에 정계복귀를 앞둔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후 행보에 따라 또 다른 정당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총선 전 정당 난립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야권의 분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보수진영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우리공화당으로 갈라졌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국민의

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섰다.

이에 따라 총선 전 각자의 의석수 확대를 위해 이들 정당들이 얼마나 ‘협종연횡’에 성공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각자 도생’이 쉽지 않다면 어떻게든 힘을 모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공산이 크다.

별써부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각 진영별로 ‘통합’이라는 이름의 이합집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미 보수진영에서는 혁신통합주진위위원회(혁통위)를 중심으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전진당이 보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진보진영에서도 이날 대안신당의 창당을 기점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움직임을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짧은 시간 안에 말그대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당과 창당, 그리고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보수당의 경우, 창당 나흘 만에 한국당과 혁통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안신당 또한 공식 창당을 하기 전부터 자신들이 뛰쳐나왔던 평화당과의 호남통합 의사를 내비쳐왔다.

자신들의 의원직을 유지하고 세력을 지키기 위한 목적 외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장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선거 전 정당 간의 이합집산은 자연스러운 것 이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하다. 오로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 외에는 지향점도 없다”면서 “(이들에게) 민생은 치장된 명분에 불과하다. 희화화된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장인 바른미래당 당대표 회의실에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손 잡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다.

‘복귀 임박’ 안철수, 누가 가장 애타게 찾나

손, 회의실 사진 바꾸며 적극 구애

보수진영도 ‘외연 확장’ 위해 관심

안축 “야권 혁신 논의가 먼저”

예셨으나, 새보수당 의원들의 탈당 이후에는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 손학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안 전 대표 측 의원은 새보수당 의원들과 함께 손 대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면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안 전 대표의 행보는 보수 통합을 논의 중인 보수진영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안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관련, ‘반문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퇴진파 활동을 해온 새보수당 측 역시 안 전 대표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념 논쟁’으로 당장 당을 함께 하자고 하기는 어려워도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이 참여하는 보수진영 통합 논의기구인 혁신통합주진위원회(혁통위) 역시 보수야권 통합의 틀 안에 안 전 대표를 포함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필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통합의 큰 그림의 완성에 안 전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행보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독자 생존을 위한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태규 의원은 통화에서 “그릇에 어떤 내용을 채워넣을지 먼저 정하고 난 후에 어떤 그릇을 선택하지 않겠니”라며 “야권 혁신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고 밝혔다.

정치를 재개한다 해도 당장 특정 정치세력과 행동을 함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뉴스1

“허위 이력도 아닌데”…與, ‘문재인 마케팅’ 제동 고심

이례적으로 많은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4·15 총선 출마가 이어지면서 이력 기재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천번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 할 청와대 참모 출신 출마자들은 70~80여 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30여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대통령 이름과 사진을 내건 포스터는 ‘문재인 마케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교통정리 중 하나가 바로 ‘이력기재’ 여부다. 청와대 근무 이력은 여론조사 비중이 높은 경선에서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만큼 강력한 요인이다.

당내에서는 청와대 참모 출신 출마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상황을 감안해 ‘문재

인 마케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말 사석에서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근무 이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신증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며 “우려하는 의견은 허위 경력이 아닌, 실제 근무 이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